

일본 자민당 단독과반 넘어 '절대안정다수' 확보

중의원 총선 과반 넘긴 261석 확보 기시다 입지 강화...총리 연임 확정 공격 능력 보유 안보정책 힘 받을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4년 만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선전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으로 첫 시집대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국정 운영에서 힘을 받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제101대 총리로 다시 선출된다.

2012년 12월 정권을 되찾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시작으로 스가 요시히데를 거쳐 기시다 내각까지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당 1강' 정치 체제는 여전히 견제함을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31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465석(지역구289석·비례대표 176석) 가운데 단독 과반 의석(233석 이상)을 훌쩍 넘어 '절대안정다수' 의석 기준선인 261석을 확보했다. 절대안정다수는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위원도 과반을 차지하는 최소 의석이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32석)과 합하면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3분의 2 의석(310석) 이상에 다소 못 미치는 293석(63.0%)을 확보했다. 자민당 단독으로는 직전(276석)보다 15석을 잃었다.

그러나 지지율 급락 사태를 겪은 스가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선거의 얼굴로 등판한 기시다 총리가 이번 총선의 승패 기준을 여당(자민+공명당) 과반 의석을 목표로 했던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선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승패 기준으로 여겨졌던 자민당 단독 과반도 무난히 달성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일각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이 불확실해 보인다는 예측이 나왔으나 무경을 열자 결과는 달랐다. 지역구의 약 4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던 접전지에서 자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야당 세력은 정권 교체를 표방하며 지역구 약 70%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세력 결집에 나섰지만, 애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총선은 자민당의 '선거의 얼굴'로 나선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4역과 새 내각에서 총재 선거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아베와 아소 다로 전 부총리 측 인사를 중용하며 자신의 색깔을 역재해는 기시다 총리로서 당내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됐다. 총선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자칫 단명 총리로 끝나는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대책, 격차 해소를 중심

으로 한 경제 대책,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기시다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도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다.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기능적인 재정정책, 성장 전략 등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을 유지하되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민당이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는 안보 강화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위원장 등 자민당 내 강경파는 총선 공약으로 방위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제시했다. 공명당이 자민당 강경파의 안보 강화 정책에 부정적인데 자민당이 절대안정다수 의석까지 확보함에 따라 공명당의 협조 없이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태국, 한국 포함 63개국에 백신 접종자 무격리 입국 허용

태국이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63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국경 빗장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인 관광업을 되살려 최약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승부수다. 다만 높지 않은 백신접종률과, 불명확한 입국 지침 등은 불안 요소다.

이날부터 한국, 미국, 영국 등 63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구비한 이들은 태국 도착 후 호텔에서 머물며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후 격리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재개방은 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태국의 관광산업은 작-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 가까이 차지한다. 그러나 2019년 약 4천만명에 달하던 관광객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670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결국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로 1998년 외환위기(-7.6%)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가 '무격리 입국 대상국'으로 지난달 21일 한국 등 46개국을 지정했다가, 재개방을 앞둔 앞두고 인도와 대만 등 17개국을 서둘러 추가한 것은 태국이 재개방에 '울인'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또 코로나19 최대 위험 지역에서는 여전히 식당 내에서 주류를 팔 수 없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수도 방콕은 오후 9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연합뉴스

G20, 온난화 제한 합의...중·러 제동에 '탄소시간표'는 불발

"기온상승 1.5°C 이내 억제" 선언 '2050년까지 탄소 제로'는 무산 디지털세 확정·백신 확대 등 약속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로마에서 폐막한 정상회의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의 1.5°C 이내로 제한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에 불참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기온상승 1.5°C 이내로 억제하자" 선언= G20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C 이내일 때가 2.0°C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치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5년 합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C 이내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아가 1.5°C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문구 자체는 파리협약과 유사하나 1.5°C 목표를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함으로써 6년 전보다 많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G20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관한 이탈리아의 마리오 Дра기 총리는 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수도 로마의 명물인 트레비 분수에서 '행운의 동전'을 던지고 있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31일 이곳에서 대면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회견에서 G20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Дра기 총리는 "G20 정상들이 상당한 수준의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의 꿈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탄소제로 시간표는 불발...시민단체 "어설픈 대책" 비판=이번 공동선언은 그러나 '통 큰'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탄소 배출제로 혹은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박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까지'라는 문구로 대체됐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했

고, 인도는 아예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심을 끈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도 '가능한 빨리' 이행한다는 문구만 적시됐다. 선진국은 2030년대 말까지 이를 달성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개도국을 설득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역시 중기적 목표로 이를 추진한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가 선언문에 담기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는 미온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백신 접종률 내년까지 전세계 70% 설정...디지털세 도입 추진=이들간 이어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확대, 디지털세 도입 등도 합의됐다. 정상들은 공동선언 중 보건 부문에서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 인구의 코

로나 예방백신 접종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내년 중반까지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개발도상국에 보금을 확대하고자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 생산 허브로 새롭게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에 대한 백신 제조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3년부터 구글·MS 등 다국적 '공용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이들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세율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연합뉴스

"극단적 이상기후가 새 표준 지구, 미지의 영역 내몰려" 세계기상기구 경고

올 여름 지구촌 곳곳을 휩쓴 강력한 폭염과 파괴적인 홍수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이제 기후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됐다는 경고를 내놨다.

BBC 등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 개막일에 맞춰 '2021 기후 상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구 온도, 극단적 이상기후, 해수면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지표전반이 망라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이래 지난 20년간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처음으로 1°C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구온도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가 이 기간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온도 상승이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WMO는 아울러 지난 9개월 간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가 역대 5번째에서 7번째로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09°C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